

경영권 승계 · 일감 몰아주기 처단

공정위 업무보고... 경제력 남용 방지 · 갑을관계 개혁 · 혁신경쟁 촉진 등 중점 추진

정부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구성권을 인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정위는 ▲경제력 남용 방지 ▲갑을관계 개혁 ▲혁신경쟁 촉진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 2세의 자본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통합(SI), 부동산 임대·관리, 물류 등 중소기업 집중업종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공익법인과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를 분석,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였던 지분요건을 모두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도 인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할 제도들이 시장에서 잘 정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노무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납품대금·가맹금 등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

도급법 및 하도급·유통·가맹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 배상제를 도입한다. TV홈쇼핑, 대형슈퍼마켓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한다.

기술유통행위에 대해서는 3배에서 10배로 배상액을 늘리고 기술유통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하도급 분야는 전속거래 실태조사와 함께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권 근거를 위해 금지대상 경영정보를 구체화한다. /뉴시스



‘실 선물은 간편식으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식품관에서 모델들이 ‘가정간편식 실 선물’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신세계백화점 제공)

농가소득 ‘1000의 법칙’ 탄생

하림, 5년째 매년 1000만원 이상 증가 고정 패턴 완성

하림이 ‘농가소득 1000의 법칙’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고 있다.

(하림에 따르면 2017년 육계 계열농가 사육소득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간 농가소득이 매년 1,000만원 이상 증가하는 고정된 패턴을 완성해 일명 ‘1000의 법칙’을 새롭게 완성했다.

농가소득 1000의 법칙은 인터넷이 확장되면서 마이크로 집의 용량이 매년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과 반도체의 메모리 용량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의 ‘황의 법칙’과 견줄만한 경이적인 기록이다.

실제로 하림 사육분부가 지난해 계열농가 3190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평균 사육소득을 조사한 결과 1억 9,100만원으로 지난 2016년 농가 평균 사육소득 1억8,100만원에 비해 정확히 1,000만원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3년 1억 5,100만원, 2014년 1억6,200만원, 2015년 1억7,100만원, 2016년 1억8,100만원, 2017년 1억9,100만원으로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1,000만원 이상 증가해 ‘1000의 법칙’을 탄생케 했다.

또한 농가당 사육소득은 계열화 초창기인 2000년 평균 5,000만원에 비해 1억4,100만원이 증가해 3.82배 늘었으며, 이 기간 농가 평균 사육규모도 2000년 3만4,000수에서 지난해 6만 7,000수로 1.97배 증가했다.

이처럼 1000의 법칙이 완성된 원인은 ▲농가당 연간 사육회수 증가 ▲계사 3.3㎡ 당 육계 생산량 확대 ▲계사 3.3㎡당 사육소득 확대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가당 사육회수는 지난 2000년 4.3회전 대비 지난해 6.1회전으로 1.42배 늘었다. 이는 육계의 사육기간이 30~34일을 기준으로 연간 4.3회

운영하던 것을 1.42회전 늘린 6.1회로 1.5회 가까이 사육할 수 있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계사 3.3㎡당 사육소득도 2000년 6만 2,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2017년엔 17만4,000원으로 11만2,000원이 올라 2.81배 증가했다.

계사 3.3㎡당 육계 생산량도 2000년 369kg에서 2017년 591kg으로 2.8배 증가했다. 이밖에 계사 현대화로 농가규모가 대형화되고 사육비 인상 등이 이뤄져 최근 5개년동안 매년 사육농가 소득이 1,000만원 이상 증가하는 새로운 패턴이 정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림은 올해 사육농가 평균 소득이 사상 최초로 2억원 달성을 가능케 하는 수치라며, 최근 10년간 평균 닭고기 가격(도매가)이 3,222원으로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하향 안정적 상황에서 농가소득은 꾸준히 올라 계열화사업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림은 앞으로도 사육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현재 3.3㎡ 당 육계 생산량 591kg을 네덜란드 1,258kg, 덴마크 1,055kg, 일본 850kg 등 경쟁국 수준으로 올리고, 사육규모 역시 6만7000수에서 8만수로 늘릴 계획이어서 오는 2020년에는 육계 계열농가 평균소득이 2억2,000만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림 이문용 대표는 “계열화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사육두수 및 사육횟수 증가,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돼 일명 ‘1000의 법칙’이 완성됐다”며 “앞으로도 계열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계사 가동률을 증가시키는 등 국내 축산산업의 성공적인 롤 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아이폰 성능저하 기능 차단 허용

애플, 올 봄 iOS 11.3 업데이트

‘배터리 게이트’로 지탄을 받았던 애플이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iOS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내놓는다.

애플은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올 봄 업데이트되는 iOS 11.3에는 배터리 상태를 표시하고 필요할 때 배터리를 수리를 권장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들은 최대 성능을 동적으로 관리하는 전원 관리 기능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기능들은 iOS 11.3 베타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관리 기능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7일 ABC뉴스에 출연해 “애플은 사용자가 배터리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성능 저하를 받아 들일지를 결정하도록 소프트웨어

를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쿡 CEO는 사용자들이 기능을 스스로 해제할 수도 있지만 애플은 그것을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럴 경우 오래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스스로 꺼져 구성 요소를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지난해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이폰 성능 저하에 대한 불만에 줄을 잇자 최대 성능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 다만 구형 기기의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을 뿐 신제품의 판매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사용자에게 대해 대체 배터리 가격을 79 달러에서 29 달러로 인하해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뉴시스

올 서민대출 11조2000억원 공급

금융위, 중금리대출 활성화 발표

금융당국이 올해 서민금융에 11조 2000억원을 공급한다.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1조원 늘리는 등 서민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주요 은행 및 금융권 협회,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포용적 금융” 관련 2018년 정책방향과 대표 과제인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일단 올해 정책서민자금 및 중금리대출에 총 11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안전망 대출을 포함한 정책서민자금이 연 7조원의 공급여력을 확보했으며, 중금리대출로 올해 4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중금리대출 안착을 위해 중·저신용자에게 적정 금리의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해 취급하는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지난해 2조 1500억원에서 올해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나아가 5대 금융그룹(신한·국민·하나·농협·우리)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중금리대출 연간 신규 공급규모를 7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대 금융그룹의 경우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2조4000억원으로 2.5배 늘린다. 이를 위해 보험, 카드 등 계열사 정보를 모아 정확성을 높인 통합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계 영업과 상품개발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뉴시스

인터넷은행은 지난해 9000억원에서 2022년 3조1000억원으로 3.5배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업 정보 등을 결합해 금융 정보가 부족한 고객에 중금리 대출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2022년 약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대 금융그룹과 인터넷은행 등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각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제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먼저 저축은행업권에 도입된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서민중이 주요 고객인 여전·신협업권으로 확대한다. 중금리 대출 공시 강화, 우수 금융기관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인 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지주 내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신용평가 정밀화를 추진한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협의체를 상반기 내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될 경우 연 70만명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 www.jmaeil.com

기사제보 288-9700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예담채

예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